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특강

## 21년 2차대비 개정법령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 08. 14.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팡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수사권 조정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 I.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 1. 중요사건 협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사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 이견의 조정과 협력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①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②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징계 및 직무배제 요구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③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④ 수사의 경합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⑤ 변사자 검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의 착수 여부나 수사할 사항 등에 대해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 ⑥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조사자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게 된 경우
- ⑦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시정조치 요구 관련 및 변사자검시 관련 제외)

#### 3. 수사기관 협의회

(1)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

(2)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II. 수사의 개시

#### 1. 수사의 개시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 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 ②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③ 긴급체포
- ④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⑤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2. 검사의 수사범위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 (1) 중요 6대 범죄

- ①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의료리베이트 범죄 등을 규정
- ② 경제범죄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관세,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산업기술유출, 마약수출입 범죄 등을 규정
- ③ 공직자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를 규정
- ④ 선거범죄로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를 규정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특강

월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랑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 21년 2차대비 개정법령

2021. 08. 14.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장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⑤ 방위사업범죄로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를 규정
- ⑥ 대형참사범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를 규정  
주의) 국가 중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 X
- (2)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3) 위 (1), (2)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III. 임의수사

#### 1.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2. 피의자 신문 시 검사에게 구제신청 할 수 있음 고지

-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2)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3. 심야조사 제한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①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②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 ③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4. 장시간 조사 제한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 ② 심야조사가 가능한 경우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X) (21.순경1차)
-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심야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휴식시간 부여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21.순경1차)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특강

## 21년 2차대비 개정법령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 08. 14.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팍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6. 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IV. 강제수사

#### 1.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했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 2. 체포·구속 시의 권리 고지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3. 피의자 석방

- (1)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4.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 (3)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V. 수사의 경합

#### 1.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2. 경찰의 사건 송치 의무

사건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7일 이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3. 경찰의 계속 수사

- (1)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포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2)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 (3)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특강

## 21년 2차대비 개정법령

월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lbes.net

2021. 08. 14.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팍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Ⅵ.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 1. 수사과정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등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 2.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1)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7일 이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3. 시정조치 요구

(1)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10일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4. 사건 송치 요구

(1)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3)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Ⅶ. 경찰의 수사 종결

#### 1. 수사종결의 형태

- ㉠ 법원송치
- ㉡ 검찰송치
- ㉢ 수사중지(㉠ 피의자중지, ㉡ 참고인 중지)
- ㉣ 이송
- ㉤ 불송치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인)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나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 2. 사건 송치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 ※ 보완수사 요구

##### (1)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송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검사는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특강

## 21년 2차대비 개정법령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 08. 14.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홈페이지 <http://www.hunzzang.com>

### 3. 사건 불송치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 ※ 재수사 요구

#### (1)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서류와 증거물 송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2) 검사의 재수사 요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 ( × )

#### (3)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송부를 한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4)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에게 사건 송치 및 신청인 통지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수사중지

#### (1) 피의자 중지와 참고인 중지

##### ① 피의자 중지

###### ㉠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② 참고인 중지

참고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 (2) 검사에게 기록 송부 및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 (3) 수사중지 결정 통지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 (4)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를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특강

## 21년 2차대비 개정법령



신광은 경찰학원

노랑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bes.net

2021. 08. 14.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팡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VIII. 검사의 재수사 요청

####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 부당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 ( × ) (20.해경3차)

#### 2. 검사의 재수사 요청

(1)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 경우 송부받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 다만,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3.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의무 및 재수사결과 통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하여야 하고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 4. 검사의 예외적 송치 요구

##### (1) 재수사 및 송치요구 원칙적 불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 (2) 예외적 송치 요구 ※ 재수사 요구는 불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 5. 재수사 중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 IX.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21.해경)

#### 1. 송치사건 및 영장청구 관련 (21.해경)

(1)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포함)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 (21.해경)

#### 2.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1)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2)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3)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 3.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의무 및 결과 통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21.해경)

※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특강

## 21년 2차대비 개정법령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 08. 14.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평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X. 검찰총장 및 검사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 1. 수사과정에서의 위법 등

##### (1) 징계요구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 (2)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통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처리 결과 통보

경찰관서장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

##### (1)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 (2)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통보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직무배제 의무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4) 처리 결과 통지

경찰관서장은 (1)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XI. 경찰의 통지

#### 1. 수사 진행상황 통지(고소인 등에게 7일 이내)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사법경찰관은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이나 그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 ②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2. 수사 종결 통지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7일 이내)

##### (1) 통지 대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 (21.순경1차)

##### (2) 통지 시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특강

## 21년 2차대비 개정법령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bes.net

2021. 08. 14.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홈페이지 <http://www.hunzzang.com>

### (3) 통지 방법

#### ①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송부를 한 경우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② 기타 종결 통지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XII.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 1. 본인의 진술기재 서류 및 제출 서류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 기록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3.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등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 4. 체포서, 영장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5.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등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열람 복사 의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 ■ 참고 법령

#### I. 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 1. 검사의 재정신청 접수 통지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 제2항 제3호(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2. 사법경찰관의 송부

사법경찰관은 위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 3. 재정신청기각 결정서 송부

검사는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송치받은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특강

## 21년 2차대비 개정법령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bes.net

2021. 08. 14. [ 토 ]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장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2. 통신비밀보호법

#### ○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②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 ③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 ①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 (1)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하고 멋진 경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